정부·전남도,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 총력전

국무총리 이어 윤호중 행안부 장관 점검
공정률 60%…道, 쓰레기 정비·안전 강화
尹장관 "정부 차원의 지원 최선 다할 것"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21일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진모지구 주행사장 현장을 찾아 주요 시설 공사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와 여수시, (재)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는 21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여수시 청소년해양교육원에서 박람회 준비 상황 보고회를 열고 진모지구 주행사장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최근 제기된 박람회 준비 미흡 등 우려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지난 16일 김민석 국무총리 방문 이후 윤 장관은 후속 점검 차원에서 행사 준비 전반을 직접 확인했다.

이날 윤 장관은 박람회 준비 상황을 보고받은 뒤 진모지구 주행사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과 교통, 편의시설, 안전 관리 대책 등을 살폈다.

현재 박람회 전체 공정률은 60% 수준이다. 전남도는 주행사장 토목 공사 81%, 전시관 35% 등 주요 공정이 계획에 따라 정상 추진되고 있어 7월까지 주요 시설 조성을 마무리하고 8월 사전 점검을 거쳐 9월 개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행사장 일원 항만의 방치 선박은 오는 6월까지 처리를 완료하고 해양쓰레기 정비를 위해 민·관 합동 집중 수거를 추진하는 등 환경 정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함께 전남도는 섬 지역 화장실, 급수시설 등 편의시설을 확충해 방문객 불편 최소화에 나선다. 특히 태풍, 폭염 등 기상상황별 대책과 재난 수준의 상황을 고려한 대응 계획을 마련하는 등 안전 관리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섬의 가치를 널리 알리며 섬의 미래 가능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이자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국제행사"라며 "관람객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두고 박람회가 차질없이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적극 협력해 정부 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관람객을 위한 가림막 등 편의시설과 재해 대비 안전시설 지원, 박람회 기간 전 국민 대상 여객선 반값 운임 지원, KTX 전라선 증편과 여수공항 부정기 국제선 운항 등 특별 교통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남은 기간 차질 없이 준비해 관람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해양 행사로 성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여수세계섬박람회 준비 상황을 두고 "인프라 조성과 홍보 등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시점인데 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준비 상황을 빈틈없이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고 지시한 바 있다. /양시원 기자

전남도, 'COP33 여수 유치' 정부에 건의

개최도시 先지정·범정부 협력 체계 등
국가 전략적 대응·신속 의사결정 촉구

전남도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33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대한민국 유치와 개최도시로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남중권 선(先) 지정을 건의하고 국가 차원의 전략적 대응을 촉구했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COP는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오는 2028년 11월 중 개최 예정인 COP33은 198개 당사국과 국제기구, 시민사회 등 5만여명이 참여하는 초대형 국제회의다.

개최지는 아시아·태평양지역 순번에 따라 올해 하반기 지역 내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2026년 COP31 또는 2027년 COP32에서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건의를 통해 ▲국가 차원의 유치 전략 수립 ▲범부처 협력 체계 구축 ▲국제 협상 대응력 강화 필요성 등을 제시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이번 건의는 COP 유치를 국가 전략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 대응과 조속한 의사 결정의 필요성을 담았다.

특히 최근 인도가 COP33 유치 의사를 공식 철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제사회의 개최지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가운데 대한민국이 선제 대응할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전남도와 여수시는 2009년 전국 최초 COP 유치 제안을 시작으로 지난 18년간 COP 유치를 위해 노력해 왔다.

오는 25일까지 개최되는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 및 녹색대전환 국제주간 개최를 통해 국제행사 개최 경험과 기반시설, 기후·에너지 산업 기반 등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무엇보다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남중권은 온실가스 다량 배출지역으로 친환경 에너지 전환 정책 실현의 핵심 지역이며 석유화학, 철강 등 국가 주력산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탄소중립 기술과 정책 실현으로 탄소중립의 미래를 가장 현실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오랜 기간 노력한 전남·경남도민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COP33의 대한민국 유치 의지를 천명하고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남중권이 개최지로 선정되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시원 기자

민주 전남도당 "강진원 예비후보 복당 절대 불가"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민주당 탈당 후 강진군수 선거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강진원 예비후보(강진군수 직무정지)에 대해 당선 이후 복당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전남도당은 21일 긴급 성명을 통해 "강진원 강진군수 예비후보가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고 나아가 당선 이후 복당을 공공연히 언급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해당 후보의 복당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당은 "강 예비후보는 스스로 당을 떠났음에도 선거에서 승리하면 다시 돌아오겠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단순한 정치적 발언이 아닌 정당을 개인의 정치적 도구로 여기는 오만한 인식의 노골적인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전남도당은 2016년 탈당, 2022년 공천 취소 이후 탈당·무소속 출마, 2026년 '불법 당원 모집 의혹'으로 인한 경선 배제 후 탈당 등 강 예비후보의 이력을 거론하며 "탈당과 복당, 무소속 출마를 반복해 온 행보는 정치적 신념이 아니라 오직 개인의 유불리에 따른 선택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도당은 "강 예비후보의 행보는 책임 있는 정치가 아닌 유불리에 따라 당을 이용해 온 정치의 전형으로 면죄부를 주는 순간 당원들의 헌신과 희생은 철저히 무시당하게 된다"며 "원칙을 버리고 탈당한 정치, 징계를 피하기 위한 탈당, 선거 승리 이후 복당을 운운하는 정치에 대해 그 어떤 타협도, 예외도 없다"고 복당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재정 기자

"시의회 본회의장 확장 공사 중단해야"

박문옥 도의원, 본회의 5분발언서 주장

전남도의회가 광주시의회의 본회의장 시설 확장 공사 추진에 대해 양 의회간 논의 없이 진행된 점을 문제 삼으며 공사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도의회 박문옥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목포3)은 21일 열린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시의회의 본회의장 시설 확장 공사 추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위원장은 "광주시의회가 본회의장 시설 확장 공사를 추진하는 것은 향후 통합특별시의회 소재지와 본회의 개최 장소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 같은 선행 조치가 전남도의회의 대응을 불러오고 그에 따른 중복 투자와 예산 낭비 부담은 결국 시·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 위원장은 전남도에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의회의 시설 확장 공사가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예산 지원이 수반돼야 하는 만큼, 전남도와 광주시가 사전 협의해 본회의장 문제를 둘러싼 갈등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재정 기자

CMYK